



## 서울특별시건축사회

1965. 10. 23 설립

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 
디자인 합니다.

회원과 함께하는  
서울시건축사회

수신자    해체공사감리자

(참 조)

제 목   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 시행 알림

1.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해체공사장 관련하여 그간 많은 안전 개선대책 시행과 건축물 관리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3건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해체공사장 특별점검(87개소)을 통하여 해체계획서 미준수,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, 감리 안전 불감증, 미온적 행정조치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

3. 해체공사 감리자께서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 불임 : 1)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 시행 알림 공문 1부.

2)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따른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(요약)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



담 당(기안) **임수현**    건축팀장 **이아영**    건축회원국장 **차재엽**    사무처장 **김상준**    부회장 **전영호**    회 장 **김재록**

협 조 자

시 행    건축 2250 - 94    ( 2023.02.07.)    접 수

우)06643  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(서초동), 7층    [www.sira.or.kr](http://www.sira.or.kr)

전 화    02-2088-5233    전 송    02-523-2284    [www.facebook.com/siraseoul](http://www.facebook.com/siraseoul)

## 【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 (주요내용) 】

### ①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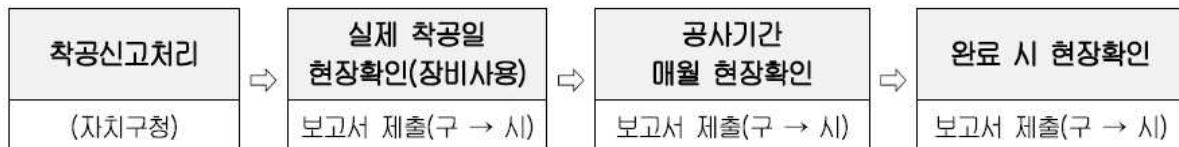
- 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시, 조건 부여
  -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에는 해체공사계약서,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
  - 해체공사 현장에는 공사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등을 비치토록 조건 부여
- ※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·단가 및 공사금액 명확히 표기된 내역서 비치
- 계약금액, 장비/인력 투입내역 등을 표기토록 ‘해체 현장 안전점검표’ 개선
- ※ 해체공사장 감독 공무원 등에 특별사법경찰 수사/조사 권한부여 법 개정 추진

### ②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 및 심의 철저

-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시, 전문가 현장확인을 선행
- 해체계획서 심의시, 심의위원이 현장확인 선행

### ③ 전문가·자치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 실시 후 결과 제출

- 실제 착공일(해체장비 사용 첫날), 매월, 해체 완료시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



-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 및 시공사 행정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 제출
- ※ 개선된 해체현장 안전점검표 활용 (붙임3 양식)

### ④ 서울시(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, 중대재해감시단) 집중점검 추진

-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'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' 구성(10인 이상)하여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
- 중대재해감시단(구 안전어사대)을 활용, 특별점검 병행

### ⑤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한 벌점, 고발 규정 등 역량강화 교육 강화

(온/오프라인)

## □ 점검 현황

- 점검 : 해체공사장 96개소(시 17개소, 자치구 점검 79개소)
- 기간 : '22. 11. 7. ~ '22. 11. 30.

구분	점검 개소	지적건수 (계)	유형별 지적내용			조치결과 (계)	조치유형		
			해체계획서 미준수	현장 안전관리 미흡	기타		현장시정	공사중지	행정처분
계	96	90	12	77	1	90	89	1	0
서울시	17	29	8	20	1	29	29	0	0
자치구	79	61	4	57	0	61	60	1	0

## □ 점검 결과 [문제점 및 주요 지적사항]

- 현장 편의주의적 공사로 해체계획서 미준수, 현장 안전관리 미흡
  - (해체계획서 미준수)
    - 해체계획서 변경 허가 없이 공사관계자 임의로 변경하여 작업 진행
    - 벽체 비계 이음 해체 순서 미준수로 전도 우려
    - 즉시 반출되지 않은 폐기물 적재 상태에서 해체장비 작업으로 전도 및 적재 폐기물 붕괴 우려
  - (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환경 피해 발생 )
    - 가시설 (낙하물 방지망, 분진망, 가설울타리 등) 미설치
    - 적정 신호수 미배치 및 살수량 부족
-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미흡
  -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단순 시정 조치 반복
    - 공사관계자(시공사, 감리자)에 대한 행정조치 전무
      - ※ 지적사항 61건 중 단순 시정 조치 60건, 공사중지 1건 (고발, 과태료 부과 X)
  -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구별, 담당자별 행정조치 결과 상이
- 공사기간이 짧은 해체공사장 적기 점검 어려움
  - 착공 전 안전점검 이후 해체 중 점검 곤란 (인력부족 등)

붙임 2

직접시공계획서 양식 [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[별지제22호의6 서식 ]
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22호의6서식] <개정 2021. 8. 27.>

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

(앞쪽)

공 사 명					
①공 종	공종:	세부공종:		현장소재지	
발 주 자	상호(기관명)	구분		대표자	
		[ ] 공공기관 [ ] 민간			
	주소				
수 급 인	상 호		대 표 자		
	영업소 소재지				
도급방법	[ ] 단독도급 [ ] 공동도급([ ] 공동이행방식 [ ] 분담이행방식 [ ] 주계약자관리방식)				
계약성질	[ ] 장기계속공사 [ ] 기타공사				
②계약일	년 월 일	③착공일	년 월 일	④준공예정일	년 월 일
⑤총 노무비	( 원)				

직접시공계획

직접시공 공종(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: 명)		하도급(예정) 공종	
⑥세부공종	금액	⑥세부공종	금액
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(직접시공 노무비)	원	⑧하도급(예정) 금액 합계	원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수급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구비서류	1.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·공사단가 및 공사금액(노무비)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. 예정공정표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 3

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

■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강화 대책(안) 붙임 서식

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

(7쪽 중 1쪽)

해체장비 탑재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올림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체장비를 건축물에 올리지 않음					
안전관리 체크리스트							
건축물 및 해체현장 정보	구조형식				점검일시		
	층수	(지상) (지하)			담당 점검자	소속	
	해체범위					직급	
	시공사					연락처	
	현장소장		연락처			성명	(서명)
	공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 일간)				비고	
	현장주소						
점검 항목		점검내용			점검결과		
					적정	부적정	점검자 의견
1. 해체공사 계약		▪ 해체공사 계약 체결여부 [ ] 체결 [ ] 미체결 ▪ 해체공사 계약 총액 [ ]억원 ※ 폐기물 처리비 포함					
2. 해체공사 장비 투입 내역		▪ 장비명1 [ ], 중량/규격 [ ], 대수 [ ]대 ▪ 장비명2 [ ], 중량/규격 [ ], 대수 [ ]대 ▪ 장비명3 [ ], 중량/규격 [ ], 대수 [ ]대					
3. 해체공사 인력 투입 내역		▪ 감리 배치 현황 ▶ 감리자 [ ]명 ▶ 감리(보조)원 [ ]명 ▪ CCTV 모니터링 여부 [ ] 실시 [ ] 미실시 ▪ 장비 조정(운전)원 ▶ 장비명 [ ], 인원 [ ]명 ▶ 장비명 [ ], 인원 [ ]명					

점검 항목	점검내용	점검결과		
		적정	부적정	점검자 의견
3. 해체공사 인력 투입 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비 신호수 (보조원)</li> <li>▶ 장비명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, 인원 [        ]명</li> <li>▶ 장비명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, 인원 [        ]명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산먼지 방지 (살수인력) 인원 [        ]명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로 교통·주변 안전 통제원</li> <li>▶ 작업명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, 인원 [        ]명</li> <li>▶ 작업명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, 인원 [        ]명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</li> <li>▶ 해체 작업 전 [        ]명</li> <li>▶ 해체 작업 중 [        ]명</li> <li>▶ 해체 작업 완료 [        ]명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 인력 배치 현황</li> <li>▶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분야 [        ]명</li> <li>▶ 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분야 [        ]명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체 허가(신고)여부 [    ] 허가 [    ] 신고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체감리계약 체결여부 [    ] 체결 [    ] 미체결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체감리원 상주여부 [    ] 상주 [    ] 비상주</li> </ul>			
4. 해체계획서 및 해체감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리업무일지 내용의 적정성 및 생애이력 정보체계 에의 매일 등록 여부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감리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표 내용의 적정성</li> </ul>			
5. 사전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현황, 증축 및 개축 이력 등에 대한 해체 계획서 작성자의 사전 현장조사 여부</li> </ul>			
6. 주변 환경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의 해체 전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및 해체공사 현장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여부</li> </ul>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력·가스·수도 공급시설, 정보통신 케이블 등의 설 치 현황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확인 여부</li> </ul>			

점검항목	점검내용	점검결과		
		적정	부적정	점검자 의견
7. 임시 시설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	▪ 해체계획서에 따른 임시 시설물(외부 비계, 공사용 가설울타리, 안전난간대 및 작업자 안전통로 등) 설치의 적정성			
	▪ [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만 해당] 건축물 해체 공정에 따른 외부 비계의 적기 해체 여부			
	▪ 건축물 해체 시 분리·낙하의 우려가 있는 내장재·외장재의 사전 제거 여부			
8.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	▪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[    ] 있음 [    ] 없음			
	▪ [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경우만 해당] 잭 서포트(jack support) 설치 수량 및 설치 상태의 적정성			
	▪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 순서 준수 여부			
	▪ 장비 용량(ton)의 적정성			
	▪ [장비탑재만 해당]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장비 이동 동선과 실제 이동 동선의 일치 여부			
	▪ 슬래브 위 해체 잔재물 적치 여부 (40cm 이하로 적치 여부)			
9. 안전대책 및 부산물 처리	▪ 잔재물(殘滓物) 반출을 위한 개구부 및 낙하구 설치 위치의 적정성			
	▪ 작업자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			
	▪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에 설치한 보행자 안전시설,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시설 등에 대한 관리의 적정 여부			
	▪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준수 여부			
	▪ 비산(飛散) 먼지 예방 대책의 수립·시행 여부			
	▪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·시행 여부			
종합점검결과	긴급 안전조치	[    ] 필요 [    ] 불필요		
	보강조치	[    ] 필요 [    ] 불필요		
	안전진단	[    ] 필요 [    ] 불필요		
의견 및 특기사항				

※ 점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촬영해야 합니다.

※ 점검자는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.

안전점검표

그 밖에  
안전관리를  
위하여 추가로  
확인이 필요한  
사항



임시 시설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		
구분	사진	비고 (상황설명 등)
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설치 상태		
보행자 안전조치 상태		
낙하물 방지 조치 상태		
외부 비계 현황		
탈락 위험 자재 제거 현황		
그 밖의 사항		

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		
구분	사진	비고 (상황설명 등)
잭 서포트 배치 현황		
잔재물 적치 현황 (슬래브 위 등)		
폐기물 처리 현황		
잔재물 반출 개구부 및 낙하구 설치 위치		
주요 해체장비 현황		
외벽 전도 방지장치 설치 상태		
그 밖의 사항		

그 밖의 안전대책 현황		
구분	사진	비고 (상황설명 등)
소음·진동 방지장치 설치 현황		
분진방지장치 설치 현황		
그 밖의 사항		

☐ 행정처분 규정(감리자)

## ○ 벌칙 규정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벌칙 규정
<p>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</p> <p>&lt;법 제30조의4 제2항&gt;</p> <p>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16호</p>	
<p>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</p> <p>&lt;법 제31조 제2항&gt; <b>☞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(필수)</b></p> <p>1.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</p> <p>2.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. 감리일지 등록 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 미이행</p> <p>4-1.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</p> <p>4-2.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</p> <p>4-3.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 거부하거나 미실시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17호</p>	<p>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p> <p>※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</p>
<p>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</p> <p>&lt;법 제32조 제1항&gt;</p> <p>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</p> <p>2. 안전관리대책(화재·붕괴·교통·안전통로 확보·추락 및 낙하)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</p> <p>3.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사항 이행 확인</p> <p>4.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 처리 여부 확인</p> <p>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18호</p>	
<p>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</p>	<p>법 제51조제1항</p>	<p>10년 이하의 징역 또는</p>

<p>&lt;법 제32조 제2항&gt;</p> <p>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,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제19호	<p>1억원 이하의 벌금</p> <p>※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</p>
<p>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&lt;법 제30조의4 제2항&gt;</p> <p>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</p>	법 제51조의2 제4호	<p>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
<p>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p> <p>&lt;법 제31조 제2항&gt; <b>☞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(필수)</b></p> <p>2.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</p>	법 제52조 제11호	<p>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
<p>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(2022. 12. 11. 시행)</p>	법 제52조 제12호	
<p>제32조제3항에 따라 <u>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</u></p> <p>&lt;법 제32조 제3항&gt;</p> <p>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.</p>	법 제52조 제13호	<p>1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

○ 과태료 규정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법 제31조제2항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<법 제31조 제2항> <b>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(필수)</b> 1.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3. 감리일지 등록 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 미이행 4-1.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-2.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-3.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 거부하거나 미실시	법 제54조제1항 제1호	2,000		
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<b>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</b>  <법 제32조 제1항>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1. <u>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</u> 2. 안전관리대책(화재·붕괴·교통·안전통로 확보·추락 및 낙하)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.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사항 이행 확인 4.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 처리 여부 확인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	법 제54조제1항 제2호	2,000		
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<b>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</b>	법 제54조제1항 제3호	2,000		
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<b>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·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</b>	법 제54조제1항 제4호	1,000	1,500	2,000
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<b>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/b>	법 제54조제2항 제11호	500	750	1,000

□ 행정처분 규정(해체 작업자)

○ 벌칙 규정 (※ 과태료 규정 없음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벌칙 규정
<p>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<b>공중의 위험</b>을 발생하게 한 자</p> <p>&lt;법 제30조의4 제2항&gt;</p> <p>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16호</p>	
<p>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<b>공중의 위험</b>을 발생하게 한 자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20호</p>	<p>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p> <p>※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</p>
<p>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<b>공중의 위험</b>을 발생하게 한 자</p> <p>&lt;법 제32조의2&gt;</p> <p>제32조의2(해체작업자의 업무)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</p> <p>2.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,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,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</p> <p>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</p>	<p>법 제51조제1항 제21호</p>	
<p>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p>	<p>법 제51조의2</p>	<p>2년 이하의 징역 또는</p>

<p>&lt;법 제30조의4 제2항&gt;</p> <p>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</p>	제4호	
<p>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</p> <p>&lt;법 제32조 제2항&gt;</p> <p>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,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>법 제51조의2 제5호</p>	<p>2천만원 이하의 벌금</p>
<p>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</p> <p>&lt;법 제32조의2&gt;</p> <p>제32조의2(해체작업자의 업무)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</p> <p>2.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,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,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</p> <p>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</p>	<p>법 제51조의2 제6호</p>	



# 행정처분 규정(관리자)

## ○ 벌칙 규정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벌칙 규정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9호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※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0호	
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3호	
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4호	
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5호	
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6호	
<법 제30조의4 제2항>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		
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20호	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벌칙 규정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<b>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</b>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	법 제51조의2 제2호	
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<b>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</b>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	법 제51조의2 제3호	
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<b>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b>  <법 제30조의4 제2항> ②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,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 이행	법 제51조의2 제4호	
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<b>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</b>  <법 제32조 제2항>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,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법 제51조의2 제5호	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<b>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</b>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	법 제52조 제7호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<b>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</b>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	법 제52조 제9호	
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<b>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</b>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	법 제52조 제10호	
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<b>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</b> (2022. 12. 11. 시행)	법 제52조 제12호	

○ 과태료 규정

(단위: 만원)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(해체허가)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건축사/기술사)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8호	1,000		
(해체신고)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건축사/기술사)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9호	1,000		
법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3호	500		
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12호	500		
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4항 제8호	100		

□ 행정처분 규정(해체계획서 작성·검토자)

○ 벌칙 규정 (※ 과태료 규정 없음)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벌칙 규정
제30조제4항(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1호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제30조제5항(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	법 제51조제1항 제12호	※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
제30조제4항(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	법 제51조의2 제2호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30조제5항(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	법 제52조 제8호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**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** 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8)

○ **건설사업자,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**

번호	주요부실내용	벌점
10)	가설구조물(비계, 동바리, 거푸집,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.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) 설치상태의 불량 가) <u>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</u> 나)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(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)으로 보수·보강(경미한 보수·보강은 제외한다)이 필요한 경우	3 2
11)	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)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)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) <u>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,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</u>	3 3 2